
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지원 대책

2018. 7. 18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일자리·소득분배 상황	1
[참고] 저소득 가구 특성	3
II. 추진방향	4
III. 중점 추진과제	5
1. 일자리 지원	5
2. 소득 지원	6
3. 영세자영업자 지원	8
4.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	11
IV. 구조적 대응	13
[첨부] 기타 추진과제	15

I. 일자리·소득분배 상황

□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·소득여건 악화

- 우리경제는 **양극화 심화**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, 경제전반의 **고용창출력이 둔화**되는 모습

* 고용탄성치:('11)0.5 ('12)0.8 ('13)0.5 ('14)0.6 ('15)0.5 ('16)0.3 ('17)0.4 ('18.1/4)0.2

-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**임시·일용직**(1분위의 46%), **영세자영업자**(26%)가 큰 폭 감소하며 **고용 부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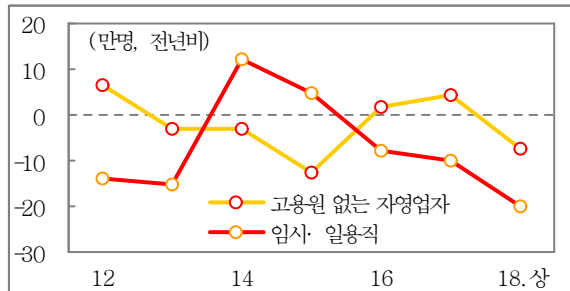
* 취업자 증감(만명):('16)23.1 ('17.上)36.0 (下)27.2 ('18.1/4)18.3 (4)12.3 (5)7.2 (6)10.6

* '18.상반기 취업자 증감(만명): (임시·일용직)△20.1 (고용원 無 자영업자)△7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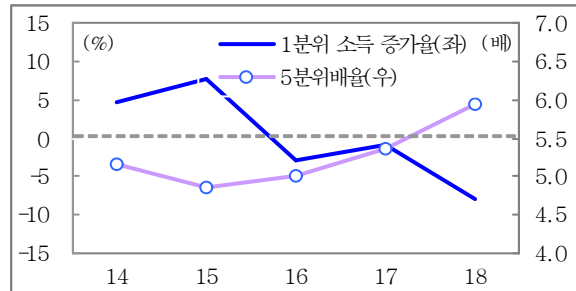
- **1분위**(하위 20%) **소득 감소** 등으로 **분배상황 어려움**도 심화

* 5분위배율(1/4분기 기준):('16)5.02 ('17)5.35 ('18)5.95('03년 이래 최고치)

임시·일용직/고용원 無 자영업자 추이



1분위 소득·5분위배율(1/4분기) 추이



□ 구조적·경기적 요인 복합 작용 → 단기간 내 개선 어려운 상황

- ① **인구구조 변화**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, **고령층은 일자리·소득기반 미흡** 등으로 **빈곤율**이 OECD 국가 중 최하위

* 경활율/고용률(%,'18.1/4): (전체) 62.3/59.6 (65세이상) 29.1/27.1

* 연금의 소득대체율(%,'16): (韓)39 (OECD)53 / 노인빈곤율(%,'15): (韓)46 (OECD)13

- 특히, **1분위 가구주** 중 **70세 이상** 비중 크게 증가

* 가구주 中 70대이상 비중('17.1/4→'18.1/4, %): (전체)11.5→12.6 (1분위)36.7→43.2

② 영세자영업자는 과당경쟁 심화, 수수료·임차료·채무상환 등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소득감소, 폐업확대

* 자영업자 비중(% , 한국<'17> 외 '16년): (韓)21.3 (美)6.4 (英)15.4 (日)10.6 (獨)10.4

* 자영업자(종사자 1~4인) 증감(만명, 전년비): ('15)△11.1 ('16)△1.6 ('17)7.6 ('18.上)△4.8

▪ 中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소매·숙박음식 중심 업황부진

* 실질GDP 증가율(% , 전기비, '17.4/4→'18.1/4): (도소매)0.9→△0.1 (숙박음식)△1.3→△2.8

③ 자동화·온라인화 등으로 비숙련·저소득 노동자 일자리 대체

* 셀프주유소 비중(%): ('15)16.6→('17)18.4 / 온라인판매 비중(%): ('15)11.5→('17)13.9

▪ 최근 차·조선 구조조정, 내수업종 업황부진,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등으로 임시·일용직 감소폭 확대

* 임시·일용직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16)△7.8 ('17.上)△8.0 (下)△12.2 ('18.上)△20.1

* 30~50대 여성(숙박음식업), 60대 이상(시설관리), 소규모업체(1~4인) 고용 부진 심화

⇒ 고령화 진전 속도,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추세 등 감안시 현 상황 방치할 경우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우려

▪ 주요국 대비 낮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, 1분위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미흡 등으로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에 한계

*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(% , '16년) : (韓)10.4 (OECD)21.0

※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: (韓)0.046<29개국 중 27위> (OECD)0.161 ("조세·이전지출 반영 전후 지니계수 변화"로 산출, OECD, '15년)

□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+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필요

○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·소득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내수활력 제고 필요

○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

[참고] 저소득 가구 특성(전국가구, 2인이상)

① ① 급속한 고령화, ② 높은 장애인·한부모 가구주 비율

- 1~2분위는 가구주 연령이 높으며,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

분위별 가구주 평균연령 및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

	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
가구주 평균연령 (세)	'09.1/4	56.2	47.3	45.6	45.2	45.3
	'18.1/4	63.4	52.6	49.5	48.5	49.2
	증감	7.2	5.3	3.9	3.3	3.9
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(%, %p)	'09.1/4	21.4	5.4	2.4	1.7	1.0
	'18.1/4	43.2	11.6	5.0	2.4	0.9
	증감	21.8	6.2	2.6	0.6	△0.1

- 장애인과 한부모 가구 비중이 여타 분위 대비 높은 수준

* 장애인/한부모 가구 비중(%,'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):

<1분위>19.1 / 3.3 <2>10.5/5.5 <3>7.5/2.7 <4>6.7/1.4 <5>5.9/0.7

② 낮은 취업률, 높은 임시·일용직 비중 → 고용 여건 열악

- 1분위의 경우 가구주 고령화 등으로 취업률이 매우 낮으며, 가구당 취업자수도 여타 분위에 비해 낮은 수준

* 가구주 취업여부(%,'18.1/4): <1분위>43.0 <2>80.2 <3>88.6 <4>92.9 <5>96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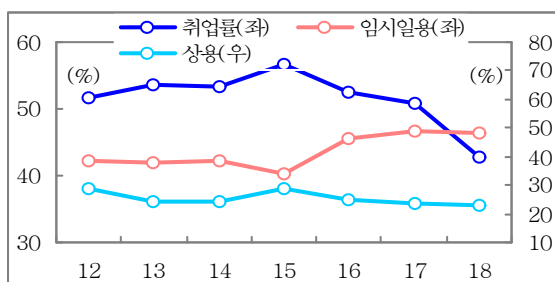
* 가구당 취업자수(명,'18.1/4): 0.67 1.24 1.50 1.80 1.97

- 저소득층은 주로 임시·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

* 임시·일용직 비중(%,'18.1/4): <1분위>46.4 <2>26.3 <3>12.6 <4>9.3 <5>3.4

* 고용원 無 자영업자 비중(%,'18.1/4): 25.8 24.3 18.0 17.9 10.5

1분위 취업률, 상용/임시·일용직 비중 분위별 고용상황 변화('12.1/4→'18.1/4)



(%p)	취업률	상용직	임시·일용직
1분위	△8.8	△5.6	4.5
2분위	△7.1	0.4	△0.4
3분위	△2.7	5.3	△4.4
4분위	△1.4	0.7	△1.5
5분위	1.4	2.4	△1.1

* 각년도 1/4분기 기준

Ⅱ. 추진방향

- 저소득 어르신, 영세자영업자, 임시·일용직 등 취약계층을
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
-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, 기준변경 등 통해 즉시 추진
- 제도개선 등 내년 이후 과제도 지속 추진하되,
재정이 수반될 경우 예산·세제 개편안에 반영

【 일자리·소득지원 】

- ① **일자리 지원** :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
 - **어르신 일자리** 위기지역 3천개 추가 지원('18년 총 51만개),
'19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개 일자리 지원
 -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강화
- ② **소득 지원** : 어르신 기초연금 25만원 인상('18.9월),
소득하위 20%는 '19년 30만원 조기 인상
 - 기초생보(생계급여) 부양의무자 기준 '19년 조기 완화,
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장려금 재도입, 주택연금 제도 개선
- ③ **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** : 소상공인페이 구축으로 0%대
초반으로 결제수수료 경감, 저리 자금대출 1조원 추가 지원
- ④ **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** :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,
재정보강 등 통한 내수활력 제고, 대표규제 혁신 추진

【 구조적 대응 】

- 일자리·소득분배 근본 개선 위해 사회안전망 꾸준히 확충
- 기초생보 확대를 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자립지원 강화
-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, 지급액 인상 등 보장성 확대

Ⅲ. 중점 추진과제

1. 일자리 지원

① EITC 대폭 확대

- 지원대상 : 연령·재산·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現 166만가구에서 '19년 334만가구로 확대(168만가구 추가 지원)

	현행		개선
연령요건	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	⇒	연령 기준 폐지
재산요건	가구당 1.4억원 미만	⇒	가구당 2억원 미만
소득요건			
단독가구	1,300만원 미만	⇒	2,000만원 미만
홀벌이	2,100만원 미만	⇒	3,000만원 미만
맞벌이	2,500만원 미만	⇒	3,600만원 미만

- 최대지원액 : 단독가구 +65만원, 홀벌이 +60만원, 맞벌이 +50만원

※ EITC 최대 지원액 변화



- 지원시기 : 다음연도 年 1회 →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(근로소득자)
- 총 지원액 : 1.2조원에서 3.8조원으로 3배 수준 증가

②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

- '18년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·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개 추가 지원, 월 27만원 수준(참여수당) 소득 제고

* (고용·산업위기지역) 울산 동구, 군산, 창원 진해구, 거제, 통영, 고성, 목포, 영암, 해남

- '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'18년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 하여 총 60만개 지원

- 학업지도,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
→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(60시간)·월급(54만원) 보장

③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

-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<'19년>

* (現)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, 월 30만원/3개월
→ (改)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(일정소득 이하), 월 50만원/6개월

-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(중위소득 50% 이하)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('19년 시범 추진)

-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(월 150만원)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(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) <'18년>

* 現 압류금지 금액(월 150만원)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'11년 이후 동결

2. 소득 지원

① 기초연금 조기 인상

- '18.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(약 500만명)
- 소득 하위 20% 어르신은 '19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(당초계획 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추가지원, 약 150만명)
- 소득 하위 20~40%는 '20년부터 30만원 지원

※ 기초연금 인상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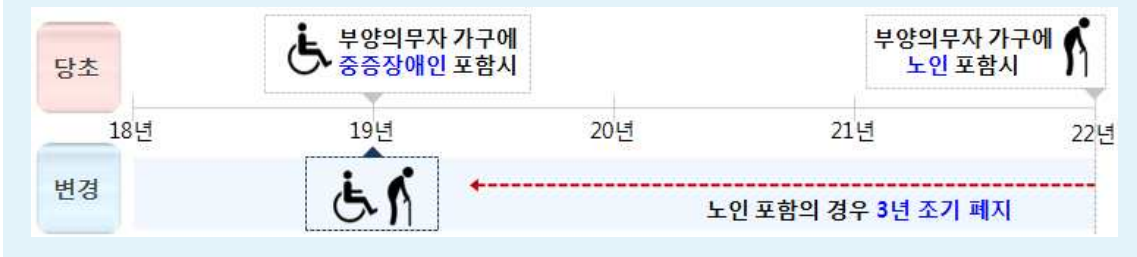


2 기초생활보장 강화

-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**부양의무자 가구**에 소득 하위 70% **중증장애인** 또는 **노인**이 포함된 경우에는 **지원** <'19년>

*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 추가 지원

※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 계획



- 생계급여를 받는 **75세 이상**과 **장애인**은 근로·사업 소득에서 **20만원 추가 공제**하여 월 최대 **14만원 추가 지원** <'18년>

* 생계급여 = 기준급여액 - 소득인정액(근로·사업소득 일부 공제)

* 現 근로·사업소득의 30% 공제 → 20만원 공제 후 30% 공제

- **자활근로 참여자**('18년 4.7만명)는 **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%** ('18년 월 109만원 수준)에서 **80% 수준**으로 인상 <'19년>

- 생계급여 산정시 **자활근로소득의 30%**를 소득인정액에서 **공제**

* 시장진입형, 인턴도우미형,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자활장려금 지급

* 약 2만명에게 월 최대 38.5만원 추가 지원 예상(월소득 139만원 가정)

- 실직 등 **위기사유 발생**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**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**(지가상승률 등 반영 재산요건 완화, '19년)

* 재산요건 완화(억원) : (대도시)1.35 → 1.88 / (중소) 0.85 → 1.18 / (농어촌) 0.73 → 1.01

※ 4인 대도시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 117만원, 의료급여 300만원, 주거지원 64만원 등

- **한부모 가족**의 **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**(14세 → 18세 미만 자녀, 약 8만명 → 10만명), **지원금액 상향 조정**(월 13만원 → 17만원) <'19년>

*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(만원) : ('18)13 → ('19)17 → ('20)18 → ('21)19 → ('22)20

③ 주택연금 제도 개선

- 단독·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**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**할 수 있도록 개선(주금공법 개정) <'19년>
-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**유동화**(MBS 발행)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연금 수급액 확대

3. 영세자영업자 지원

① 경영부담 완화

- **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**(소상공인페이)을 구축하여 **결제수수료 부담을 0%대 초반으로 완화** <'18년>
 - * 소비자 앱 설치 → 구매·결제 → 플랫폼 승인 → 정산
 - * 신용카드 → 소상공인페이 결제수수료 변화(案) :
(매출3억 이하) 0.8 → 0% (매출3~5억) 1.3 → 0.3% (매출5억 이상) 2.5 → 0.5%
- **이용금액**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**40% 소득공제 지원**
- 소상공인 등에 대한 「**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**」 마련
<'18년 방안 마련 → '19.1월 시행>
 - * 관계기관·업계·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,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 검토
 - **결제대행업체(PG) 이용 온라인사업자**도 자신의 매출액이 **영세**(3억원 이하)·**중소**(3~5억원) 사업자에 해당하면 **우대수수료율 적용**
 - * 현재 PG가 대표 가맹점이 되어 영세·중소 온라인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 미적용
 - **신규사업자**가 사업개시 후 **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**될 경우, 선정 직전 **6개월간 카드매출**에 대해 **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**
 - **카드수수료 원가분석**을 거쳐 산출된 **원가 하락분**(인하 여력)을 토대로 **카드수수료 인하방안** 마련

-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편의점·제과점·약국 등 **소액결제**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('18.7.31일 시행)
 - * 평균수수료율 편의점 **0.61%p↓**, 제과점 **0.55%p↓**, 약국 **0.28%p↓** 추정
- 소상공인이 **운영·긴급생계자금**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**해내리 대출**을 **1조원** 추가 확대 <'18년>
 - *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출시 1.0%p 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(기업은행)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**영세사업주 부담**을 **완화**하기 위해 '19년에도 **일자리 안정자금**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**지속 지원**
 - * 지원대상·요건·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19년 예산안에 반영
-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**“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”** 추진방안 검토(소상공인진흥공단-지자체 협업) <'19년>
 - * (예) 도시재생·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 매입, 저렴하게 임대하여 상권활성화 지원

2 영업·재기 안전망 강화

- **상가 임차인**은 **10년까지**(現 5년) **계약갱신요구권**을 보장, 철거·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**임차인 보호방안** 마련 <'18년>
 - *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·법제화
- **1인 소상공인**에 대한 **고용보험료 지원대상**(1→2등급까지) 및 **지원금액**(30→50%) **확대**(2년간 지원) <'18년>
 - * 1등급(기준보수 154만원) 월 17,325원, 2등급(기준보수 173만원) 월 19,460원 지원
-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**영세자영업자**(약 3.5만명)의 재기 지원을 위해 **부실채권**('17년 기준 4,800억원) **조기 정리**
 - *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프로 매각하여 처리

○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·비생계형업종으로 전환시에 교육, 컨설팅 등 '재창업 패키지' 지원 강화

○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·재취업을 도와주는 '희망리턴 패키지' 지원 확대

* 점포철거·원상복구 지원규모('18년 500건) 확대 및 지원한도('18년 100만원) 인상 등

○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제고, 본부의 광고·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<'18년>

▪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

▪ 가맹본부·임원의 위법·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배상책임 명시

⇒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방안 지속 발굴·추진

4.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

【 소비 활성화 】

- 승용차 구입시 **개별소비세**를 '18년말까지 5→3.5%로 **30% 감면**
(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)
- **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**을 확대('18년 11.6 → '19년 15만대)하고,
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**개별소비세 70% 감면**
(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- * 조기 폐차 지원('05년말 前 등록차량): 3.5t 미만 최대 165만원, 3.5t 이상 770만원 한도
 - * 개소세 감면('08년말 前 등록차량): '19.1.1일부터 1년간 시행

【 투자 활성화 】

- 기금변경·공기업 투자 등 약 **4조원 규모 재정보강**
 - ① (기금변경: 3.2조원) 주거·신성장 분야, 위기업종·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
 - ② (주거·안전·환경 투자: 0.6조원) 노후 임대주택 정비(LH), 도로·철로 안전설비 확충(도로·철도공사), 미세먼지·오염저감 설비보강(발전 공기업) 등 확대
 - ③ (지자체 추경) 신속한 편성·집행으로 지역 SOC 사업 조기 추진
 - *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, '예산 성립 전 집행' 등으로 집행 가속화
- **광주형일자리**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·확산 추진

【 대표규제 혁신 】

- 8월중 시장·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**핵심규제 선정·발표**, 하반기 중 입지·공유경제 등 분야의 **규제개선 추진**
-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**장기 미해결 규제혁신**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 집중
- 핵심규제별 개선 추진상황을 **정례점검**(필요시 대통령 주재), **연내성과 창출 달성**

<참고> 대상별 주요 지원 사항

1 어르신

일할기회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기지역 일자리 3천개 추가 지원 ('18년) ▶ 일자리 60만개 지원 ('19년) <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신설 >
소득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초연금 21 → 25만원 인상 ('18년) ▶ 소득하위 20% →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('19년) ▶ 생계급여 받는 75세 이상 → 근로·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 ('18년) ▶ 단독·다가구 주택 등 보유 60세 이상 →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('19년)

2 영세자영업자

경영부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상공인페이 구축(수수료 0%대 초반, '18년) ▶ 소상공인 등에 대한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」 마련 ('18년) ▶ 운영자금 등 저금리 대출(해내리) 1조원 확대 ('18년) ▶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내 지원 지속 ('19년)
영업·재기 안전망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→10년으로 연장 ('18년) ▶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<대상 1~2등급까지/지원을 30→50%> ('18년) ▶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정리 (약 3.5만명, 4,800억원) ('18년) ▶ 업종 전환, 사업정리·재취업 지원 강화 ('19년) ▶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, 광고·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('18년)

3 임시·일용직 등 취약계층

근로유인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('19년) ▶ 자활 급여 최저임금의 70→80% 수준 인상('19년) ▶ 자활장려금 도입('19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근로소득의 30%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▶ 최저임금 감안 압류금지 최저금액(150만원) 상향 ('18년) ▶ 청년 구직활동지원금(월 50만원/6개월) 지급('19년)
기초생활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지원 ('19년) ▶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→ 근로·사업소득에서 20만원 추가공제 ('18년) ▶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→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('19년) ※ 재산요건 완화(억원) : (대도시)1.35→1.88 (중소)0.85→1.18 (농어촌)0.73→1.01 ▶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('19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(14세 → 18세 미만 자녀), 지원액(월 13만원 → 17만원)

IV. 구조적 대응

① 사회보장제도 강화
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**부양의무자 기준 완화** 조기 추진, **소득산정 기준 현실화** 등 통해 빈곤층 지원의 **사각지대 해소**

※ **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**(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)

- ▶ (주거급여) '18.10월
- ▶ (생계급여) '19.1월<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>
- ▶ (의료급여) '19.1월<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 포함시>, '22.1월<소득하위 70% 노인 포함시>

-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급여 인상 등 **자립 지원 강화**
- 기초연금과 함께 **장애인 연금**을 **인상**('18.9월, 21 → 25만원)하고, **국민연금**의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**완화** 등 제도개선 추진

② 실업안전망 확충

-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, 지급액 인상 등 **보장성 강화**
* 지급기간 최대 8→9개월, 지급액 평균임금의 50→60%(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
- 어르신, 예술인, 특수형태근로자 등 **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**,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**한국형 실업부조** 도입 추진
- 안전망 바탕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등 **혁신형 고용안정 모델** 구축

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

- 아동수당 지급(0~5세, 월 10만원) 등 저출산 대응 강화
- 청년의 **구직활동 지원**을 지속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교육·훈련 지원 강화
- 어르신은 **일자리 지원**을 **확대**('22년 80만개)하고 **참여수당 인상**

⇒ **구조적 대응 과제**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**지속 발굴·추진**

<참고>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

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

❖ 국정운영 계획 :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

- ▶ ('17.11월) 수급자·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예 : 老-老 부양, 장애인-장애인 부양)



② 기초연금 확대

❖ 국정운영 계획 : '18년 25만원 인상, '21년 30만원 인상



③ 실업안전망 강화

❖ 국정운영 계획 : 실업급여 지급액·지급기간 상향으로 보장성 강화

- | | |
|------|---|
| 실업급여 | ▶ (현행) 지급액(평균임금의 50%), 지급기간(최대 8개월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 : (한국) 8개월 (OECD) 18개월 * 순임금대체율(실업후 한달/1년, %) : (한국) 51/32 (OECD) 64/53 |
| | ▶ (개선) 지급액(평균임금 50→60%), 지급기간(최대 8→9개월) 확대 추진 |
| | * 고용보험법 개정안 既제출('18.4월 정부안 제출, 한노위 계류중) |

1. 어르신

- ▶ 5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(신중년 적합직무 대상)하는 중소·중견기업 고용장려금 지원(중소 최대 80만원/중견 40만원)을 2천명 → 3천명으로 확대 <'18년>

* 신중년 적합직무(55개) : 경영·진단 전문가, 전기설비 기술자, 산업 카운슬러, 상담전문가 등

- ▶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 대한 통신요금 월 최대 11,000원 감면 <'18년>

- ▶ 60세 이상(국민연금수급자 대상)에 대한 의료비·전월세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한도를 750 → 1,000만원으로 확대 <'18년>

- ▶ 65세 이상은 보유한 노후 단독주택 매각(LH 매입)을 통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 (연금형 매입임대사업 확대, '18, 100호 → '19, 200호) <'19년>

* LH는 주택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청년,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

2. 영세자영업자

- ▶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저리자금 지원 확대

* 전체 조합원 중 60%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에 대해 대출금리 0.2%p 인하

- ▶ 노후 모텔, 여관 등의 숙박시설 운영자는 개·보수사업 자금 지원 확대

* (소상공인진흥기금) 자금 지원을 고용·산업 위기지역의 모텔·여관까지 확대

* (관광진흥개발기금)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모텔·여관 등 지원

- ▶ 영세 대리점 권익보호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'표준 대리점계약서' 보급

* 초기 설비투자비용 대비 계약기간이 짧은 업종 → 계약갱신요구권 설정(최소 3년)

*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·판촉행사 요청이 잦은 업종 → 본사의 비용분담 비율 설정

- ▶ 고령의 전통시장 상인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

ICT·마케팅·행정분야 등의 경력단절 전문여성 매칭 지원을 확대 <'18년>

*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고용 지원

3. 임시·일용직 등 취약계층

- ▶ 조선·자동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의 고용유지(무급휴업·휴직 등) 지원 확대 <'18년>

* 1인당 1일 6만원,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에서 지원(최대 180일)

- ▶ 구조조정 지역 조선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·취업 지원(목적예비비 활용) <'18년>

- ▶ **일자리 함께하기 및 고용촉진장려금**(여성, 장애인 등) **지원대상 확대** <'19년>
 -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 → 100% 이상 급여 지급시로 완화
 - * 일자리 함께하기(신규채용 인건비: 근로자 1인당 월 40~100만원, 임금감소분 보전: 월 최대 40만원)
 - * 고용촉진장려금(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~60만원)
- ▶ **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당 10 → 15만원으로 확대** <'19년>
 - * 現 세금 산정시, 일당에서 10만원 공제 후 6% 세율 적용 후, 55% 세액공제 적용
 - ※ (예) 일당 15만원인 경우 납부세액 = $\{(15\text{만원}-10\text{만원}) \times 6\%\} \times 0.45 = 1,350\text{원}$
- ▶ **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**('18년 1,200 → 1,500명) <'18년>
- ▶ **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**(임금체불생계비) **대출 지원 대상 확대** <'18년>
 - * (배우자합산) 3인가구 중위소득(연 4,420만원) → 4인가구 중위소득(연 5,430만원)
- ▶ **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·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**(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) **지원을 1인당 20 → 30만원으로 확대** <'18년>
- ▶ **청년·여성·장애인·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은 정부 조달사업 참여시 가산점 확대·신설 등 인센티브 확대** <'19년>

4.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

- ▶ **외국인 전용 코리아투어카드 할인 참여업체 및 판매처 지속 확대** <'18년>
 - * 관광지·교통·쇼핑·숙박·음식 등 179개 업체가 최대 60% 할인 혜택 제공 중
- ▶ **조선·자동차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선박건조 등 **안정적 수요 확보 및 부품·기자재 R&D 등 지원**(목적예비비 활용) <'18년>
 - * 선박현대화 펀드 출자, 국립대 노후선박 대체건조비 조기 지원 등 수요 확보, 부품개발업체 판로개척·업종전환, 자율주행차 등 R&D 지원
- ▶ **조선·자동차 등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자금·컨설팅·수출·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** <'18년>
- ▶ **기업의 신성장기술 R&D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,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** <'19년>
 - * (現 R&D 세액공제 대상) 자율주행차, IoT, 빅데이터 등 조특법상 11개 분야, 157개 기술
 - * (現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) 매출액 대비 R&D 비중 5% 이상